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4. 4. 16(수) 11: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제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3인)

□ 불참위원 : 김재홍 상임위원 (1인)

---

##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1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35명이 신청 하였습니다.

###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오늘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위원님 세 분은 지난 3월 27일에 임명되었고, 저는 4월 8일에 임명이 이루어져서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출범하였지만 지난 제1, 2기 때와는 달리 8일이나 지난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한 분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하루빨리 국민들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업무를 처리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여러 규정을 보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및 다른 기관의 사례를 보더라도 위원 5명이 모두 임명되어야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도 회의를 개최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

지기를 고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2기 방송통신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된 3월 25일 이후 20일 동안이나 업무공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저를 비롯한 위원들로서는 하루빨리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를 챙기고 추진해야 합니다. 비록 한 분의 위원님은 안 계시지만 다른 세 분의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면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눈앞에 닥친 현안처리도 중요하지만 우선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방향과 과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차근차근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방송·통신 이용자들의 권익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위원장님 선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위 규정이 입법되기까지의 논의, 제1, 2기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 등을 종합하여 오늘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임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회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3기 방통위가 출범을 3월 26일 해야 하는데 임명이나 위원장님 청문회 등으로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3기 방통위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위원장님 취임하자마자 계속 현장방문을 통해 그 시급성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계시지만 단말기 보조금 문제, 그리고 지금 범정부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국회와도 계속 연일 논의 중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그리고 제3기가 처음 출범을 하니까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주요한 정책과제들을 다룰 것인지 하는 등등 이런 현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안건들을 쭉 보니까 <보고사항> 4건은 오늘 내용을 정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중요한 이슈 내지는 중요도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시한이 있어서 빨리 처리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결사항>과 관련해서는 허 위원님과 저, 그리고 김재홍 위원님이 기획조정실 업무현황 보고를 2주 전에 받을 때도 세 분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티타임에서도 논의를 했었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간에도 논의가 많이 됐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정한 안건들이 타이밍이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제3기 위원회에서 첫 회의 때 논의 내지는 결정을 해야 할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정보통신부, 舊 방통위에서 29년 동안 했는데 그때 가졌던 실무경험, 행정경험을 토대로 하고, 또 지난 4년 동안 민간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에서, 현장에서 체득한 그리고 정부기관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일을 해 온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보고 배우고 느꼈던 그런 체험을 토대로 해서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이 바라는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감사합니다.

## ○ 허원제 상임위원

- 상임위원 허원제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저도 첫 회의인 만큼 한마디 소감과 함께 또 최근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방통위 첫 출범 회의에 동료인 김재홍 위원님께서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방통위는 주어진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하루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해도 상임위원으로 임명이 된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국정 수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복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방기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상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함께 법적기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기와 제2기 방통위에서도 상임위원회 소집 첫 회의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해 왔고, 또 그것이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부위원장 호선에 대해서 김재홍 위원님께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장한 내용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저도 지난번 18대 국회에서 활동을 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김재홍 위원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국회 소위원회에서의 그 논의 내용 부분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의 내용을 구속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본회의 내용 또한 구속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는 특정 정당의 추천위원에게 부위원장을 할애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1기와 제2기에서는 상호 견양의 미덕을 발휘해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상임위원들끼리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호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입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 걸음씩 양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입법정신 그대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고로 삼고 있는 미국의 FCC도 우리의 부위원장과 같은 위원장 직무대행은 동일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맡게 됩니다. 과거 방송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인사가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한 분의 위원이 임명 안 된 상태지만 또 한 분의 위원님께서 오늘 첫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회의의 안건 및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두 차례에 걸쳐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재홍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중간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월요일에 김재홍 위원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다른 의견들을 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회의석상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정된 회의는 그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먼저 제13차 서면회의 회의록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위원회의 회의록이지만 절차상 서면회의 회의록이기 때문에 차기 회의에서 접수하도록 되어 있기에 접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 <의결안건 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의결안건 가>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결안건>에 앞서 <보고안건>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보고사항**

**가.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첫째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제3기 방통위가 향후 3년간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 위해 내부 인력으로 TF를 구성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TF는 단장은 기초실장, 그리고 구성원은 실·국 총괄 그리고 KISDI, KISA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작업을 시작하되, 필요 시 인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예시)입니다. 우선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방송광고 제도 개선,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있어 이용자 차별적 요소 개선,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규제 개혁, 조사·제재 및 심결 절차 개선 등을 예시로 뽑아봤습니다. 추진일정은 5월 중에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그 전에 위원·사무처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에는 목차에 대한 예시가 있고, 이러한 목차는 작업과정에서 의견수렴에 따라 수정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첨부한 목차안 예시를 쪽 보니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舊 방통위와 달리 기능상 규제 위주 내지는 사후 규제 기능 위주로 조정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규제기능의 진흥적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적인 진흥기능은 일부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런 사전·사후 규제기능을 합리적으로 아주 적시에 수행해 나간다면, 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작업이 아무래도 한 달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분의 위원님들이 언제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작업과정에 같이 참여하거나 이런 작업 진행 중인 현안을 보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방통위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 중에는 방송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상파 그리고 종편·보도 이런 부분을 다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크포스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부 인력은 자체 내부에서 구성하면 되겠습니다만 외부인력의 경우 주로 정보통신 쪽에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력에는 방송 쪽에 계신 분들도 좀 더 추천을 많이 해서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실무진들이 필요시에 인력을 추가한다고 해 놓았으니까 방송 쪽 인력도 보강해서 방송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외부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TF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외부인력이 일부 보충이 되더라도 실무적인 작업은 내부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1기, 제2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은 이어 받아야겠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 규제를 개선한다든지 또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시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 안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내부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외부에서 인력을 충원할 때 다양한 기반을 가진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다양한 기반을 가진 분들에게 골고루 자문을 구해서 균형을 갖춘 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정책과제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단장이시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그러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과 허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저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효율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무 처에서 보고한 내부 인력과 KISDI, KISA 전문가들로 T/F를 운영하고 분야별로 담당 과장 이나 이런 분들이 분야별 전문가와 논의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 다.

○ 허원제 상임위원

- 저도 한마디만 추가하겠습니다. 외부인력을 보면 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 기관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입안 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배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막상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 들이 느끼는 감각이나 정책적인 수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인력에도 주 로 학자나 관계에 있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뛰고 일을 하는 분들 중에 또 이 론적인 배경도 갖추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런 실무와 이론을 겸비할 수 있는 분들이 보완 이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운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첨언해서 부 탁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첫 회의가 늦고 많이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서 물론 서두른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TF 운영을 타이트하게 해서 빠 른 시일 내에 좋은 정책과제 또 비전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 음) 그러면 접수하겠습니다.

**나. 법정위원회 구성현황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법정위원회현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법정위원회 구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방송의 공 공성과 공정성, 통신이용자·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현재 11개의 법정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치정보심의위 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방송평가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 장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미디 어다양성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중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신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2기 위원님들이 맡으셨던 각 법정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공석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방통위 의결로 상임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방송평가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전체위원의 임기가 4월 13일로 이미 만료가 되어 전체위원을 새로 구성해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다음은 방통위위원장이 위원장을 직접 지명하는 위원회입니다.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가 있습니다. 이 중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위원장 한 분과 위원 한 분을 지명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치정보심의위원회는 방통위 부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고 드린 법정위원회에 대해서 상임위원간 위원장 분담 논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는 위원회 의결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는 5개 법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신규 위원 위촉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붙임>으로 법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는 임기와 前 위원장, 또 회의 개최주기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지금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전체위원의 임기가 다 만료된 상태여서 조속히 절차를 진행해서 위원들을 먼저 위촉하고, 그것에 따라서 위원장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홍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으면 상임위원께서 위원장을 하시는 위원회를 상의해서 각각 분담해서 나누어 맡으실 위원회를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오늘 김재홍 상임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느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으시는지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재홍 위원님 의견도 들어서 적절하게 각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해 주시도록 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결국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당연히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뒤에 법정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총 11개인데 제가 알기로 그중에서 위치정보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운영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들은 어떻습니까? 시급히 위원장 내지는 위원이 선임되어서 빨리 가동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언제든지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위원회를 가동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조정 건이 얼마나 되나요? 끝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벌써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심의회는 그와 연계해서 빨리 가동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먼저 시급히 위원장님을 위촉해야 하는 것은 방송평가위원회가 5월경에 회의 개최 예정이고, 그다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4월 말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지금 결정이 안 돼서 그 전에 진행이 안 되면 어려울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위원회는 이미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시급히 진행해야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신청이 들어왔을 때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총 4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현재 방송 분쟁 조정이 신청되어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이 총 10명이고 이것도 현재 위원장은 윤종록 미래부 차관이 맡고 계신데, 우리 위원회 몫 상임위원도 조속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 허원제 상임위원

- 지금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저는 그동안 제1, 2기에서 각 위원회별로 나름대로의 특성 그리고 위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비추어서 분담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기에서 지금 보고를 들어보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그리고 오늘 제가 알고 있기로도 남북 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산하에 있는 방송분과위원회도 오늘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도 상임위원이 누군가 한 사람이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남북교류를 방송통신을 통해서 촉진하고 또 앞으로 통일 이후에 대비해서 방송·통신이 해야 할 역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독일 특파원 시절의 경험부터 해서 20여년간 나름대로 공부하고 조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또 아까 잠시 제가 실무진 이야기를 보니까 그동안에 해 온 사업들 중에 우리가 보완해야 할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김재홍 위원님께서도 본인의 전문성에 비추어서 나름대로 위원회를 본인이 맡고 싶은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개 위원회를 보면 당연히 신속성을 요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결정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재홍 위원님과도 다시 한 번 상의하여 적절하게 각 상임위원들께서 위원회를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통위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다음 회의 때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위원장을 지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로 협의를 마쳐서 관련 위원회에서 다른 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접수하겠습니다.

###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현황에 관한 사항

####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현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요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거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서 징수하는 법정 부담금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징수대상은 방통위는 지상파, 종편·보도 PP를 소관으로 하고, 미래부는 SO, IPTV, 위성, 홈쇼핑 사업자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징수율입니다. 지상파, 종편·보도 PP는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의 6% 내에서 고시로 세부 징수율을 결정합니다. 또한 매년 방송사 재정상태와 방송의 공공성을 고려, 상한의 범위 내에서 징수율을 결정하여 각 방송사에게 부담금 납부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는 2008년 이후 부담금 징수율 개정 연혁을 2008년도부터 비교적 자세히 적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보시면 한편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잠식률에 비례하여 면제 또는 경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종편·보도 PP 징수율 등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개정안을 4월 위원회에 보고하고 6월 말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오늘 보고안건으로 올린 것은 부담금 개요, 제도에 대한 현황보고이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종편과 보도 PP에 대한 징수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예,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소관사항 변경도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것이 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를 개정하려면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협의나 행정예고도 해야 하고, 규제개혁 심사도 해야 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회의 때 보고한 것 같은데, 오늘은 보고만 듣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 간에 많은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방통위든 미래부 소관이든 여러 방송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부담금 징수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사업자들이 미래부 소관까지 포함해서 어느 것이 있지요?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미래부 소관까지 하면 올해는 징수대상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들 중에 지상파만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원칙적으로 올해 다 결정해야 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올해 정해야 합니까?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예, 유지할지, 변경할지를 포함해서 정해야 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미래부와 협의 내지는 스케줄상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부와도 검토할 때부터 실무적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고자 하는데 앞으로 논의할 때 필요할 것 같은데, 방송사들의 재정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업상황, 당기손익 그리고 대차대조표 등 이런 것들을 작년 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종편이나 보도 PP 같은면 허가나 승인 받은 이후부터 시계열적으로 재정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파악 내지는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말씀하시지요.

○ 허원제 상임위원

- 지금 분담금 <표>를 보니까 이것은 작년에 결정했겠지요. 2013년 지상파의 경우에는 제작년 보다 징수율을 일부 변경해서 인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경우에도 2008년도, 2009년도 그 사이에 징수율이 조금 인하가 된 것이 있고, 또 반대로 홈쇼핑은 2011년도 부터 1% 인상이 된 경우도 있고, 일반위성과 DMB의 경우에는 그대로 1%와 0%로 유지되고 있고, 2013년도에 일반위성은 1.33%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매트릭스(matrix)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 어쨌든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기주 위원님 방금하신 대로 우리가 소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미래부가 소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같은 방송으로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가 같이 연계해서, 협의 해서 결정해야 하는 요소가 강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사업주들의 입장과 견해, 그쪽의 의견도 우리가 수렴해야 하는 기회가 있지요?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예, 있습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그렇게 해서 현재의 경기상황이라든지 광고상황이 또 어떤 것인지, 앞으로 미래사업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을 놓고 보니까 우리가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료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업에 관한, 또 자본잠식에 관한 자료들을 더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할하지 않는 다른 방송들에 관한 미래부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서로 협의해서 비록 소관 부처는 다르지만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어야만 각 방송사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어서 미래부와 협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절차에 관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비록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에 앞서서 각 방송사나 또는 그 밖에 관련되는 기관이 있다면 그곳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도 수렴하는 절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그렇게 많은 여유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을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접수하겠습니다.

## 라. 단말기 보조금 시장 동향

### ○ 최성준 위원장

- 다음 보고안건으로 제가 어제 이동통신 시장을 직접 방문했었고, 또 오늘 아침에 이동통신 3사의 CEO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중이어서 길으로는 조용한 형태로 지내고 있습니다만 영업정지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라> 단말기 보조금 시장 동향에 대해서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이용자정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단말기 보조금 시장 동향입니다. 현재 영업정지 현황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부는 시정명령 위반에 관하여 이통3사에 대해 2개사씩 순차적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한바 있고, 현재는 SKT와 KT가 신규모집 사업정지 상태이고, LGU+만 단독영업 중입니다. 아래 <표>는 사업정지 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부 사업정지 기간이 종료된 이후, 5월 20일 정도 되는데... 방통위가 LGU+에 대해 14일, SKT에 대해 7일의 추가 신규모집금지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요 시장 동향입니다. 먼저 번호이동 및 보조금 추이를 보면 이통사 사업정지 3월 13일 이전의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41,000여건이었습니다. 사업정지 이후는 물론 1개 회사만 영업을 하고 있지만 7,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니터링 결과, 이통사 사업정지 이전의 보조금 수준은 37만 8,000원 수준이었고, 영업정지가 들어간 이후에 SKT 단독 영업기간 동안에는 28만원 수준, 지금 LGU+의 단독영업 기간 중에는 26만 5,000원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자 동향을 보시면 이통3사는 최근에 유통점 인증제, 그 다음에 허위과장광고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 자율적인 시장안정화에 관한 것들을 합의를 봐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 유통점들이 결의대회를 한바 있는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통사가 불법 보조금의 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정지 처분의 중단, 판매점 영업피해 즉각 보상, 유통점 인증제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지난 4월 9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T·KT가 LGU+에 대해서 미래부에 신고한 것이 있습니다. SKT와 KT는 LGU+가 사업정지 기간 동안 사전예약 형태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관련 자료를

미래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미래부는 현재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재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 중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당해 사업자의 CEO을 형사고발하겠다고 지난 3월 7일 보도자료를 낸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사업정지 기간 이후에도 안정화 추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사무국에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장안정화 노력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먼저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될 경우 사업자간 번호이동을 자율적으로 일시 제한하는 “이동전화 번호이동 제한제도” 도입을 방통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투명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오늘 위원장님께서 유통점 현장 방문, 통신업계 CEO 간담회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이 단말기 보조금 문제가 3기 방통위에서 가장 시급하게 대응·대처 내지는 해결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향 차원에서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다음 주 중에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이 이슈에 대해서 사무처 관계자들과 위원님들과 집중적으로 의논 내지는 의견수렴을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 ○ 허원제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일정이 빽빽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유통점 현장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오늘 통신업계 CEO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CEO들로부터 앞으로 정도경영을 하겠다는 다짐이라든지 또는 이동전화 번호이동 제한제도, 일명 서킷브레이크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사확인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소소한 것이라도 다양한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해야 하고,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아까 보고한 것처럼 5월에 사업정지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절대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이러한 이용자 차별되는 보조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대해서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 그다음에 어제, 오늘의 간담회를 통해서 권유되었던 내용들,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종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의결할 것이 있으면 신속히 다음이나 그다음 회의 때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의결사항

### 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2014-14-052) (비공개)

## 8. 기 타

###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다 마쳤습니다.

###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제가 부위원장님 호선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일부에서 저희가 사무총장 직제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세 분 위원님만 임명이 되고 나서 첫 기획조정실 업무현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부위원장의 역할, 그리고 행정부 내에서 차관회의를 포함해서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관련된 회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참석을 어느 위원님이 하실 것이냐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 전례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김재홍, 허원제 두 분 위원님께서 공무원 출신이고 행정경험이 있으니 저더러 그런 정부 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동안에 차관회의, 규제 개혁 회의, 비정상의 정상화협의회 이런 총리실 주관하는 회의에도 참석했고, 오늘 장관님이 통신사 CEO들과 간담회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신 참석한바 있습니다. 또 범정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TF가 구성이 되어서 방통위도 주요부처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그 회의도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고, 또 국회에서도 당정 간에 그런 개인정보 관련된 협의가 계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간에 의논한 결과에 따라서 물론 기초실장이나 다른 고위 공무원이 대신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원래 참석대상이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또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거기에 동의해 주셔서 제가 그런 차관급 회의에 참여하는 활동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해 보니까 회의에 참석하려면 회의에 대한 안건을 사전에 설명도 듣고 검토도 해야 하고, 또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는 회의결과를 사무처 간부들에게 전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회의에 참석하는 전·후로 사무처의 실·국장 내지는 과장들과 미팅을 안 할 수 없고, 협의를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역할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사무총장의 역할이나 사무처를 통할하는 개념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한 저의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기주 상임위원께서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훨씬 훌륭한 역할을 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임무를 부여해 드렸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좀 더 유기적으로 사무국과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수행하시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사무국과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외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사무총장의 역할은 저도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관례상 다음 회의날짜를 미리 결정해 놓는 것이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목요일에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워낙 급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회의날짜를 4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로 할까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날짜는 4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그날 상정할 안건은 사무처와 위원장님과 의논하겠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아까 단말기 보조금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내에서 TF는 거의 매주 열리고 또 국회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서 저는 다음 번 위원회 때 보고사항이라도 그간에 진행된 것,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안건으로 올렸으면 합니다. 아까 보조금 문제는 간담회를 다음 주 중에는 몇 시간 내서 집중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스토리도 많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제조사,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등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간에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보고안건으로 논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도 같은 생각이고 공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날짜는 4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2시 05분 폐회 】